

#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

## 인천 시민정책네트워크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 협의회,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 인천광역시주민자치연합회, 인천광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노사모, 인천도시 농업네트워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 본부,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인천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

「인천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전국 최초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범시민 소통채널로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시가 함께 인천의 현안에 대해 한마음 한목소리로 공동의제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다양한 범시민 운동 전개와 지방분권적 대정부 활동으로 인천의 현안 해결 그 중심에서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우리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여·야를 넘어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인천시민의 열망을 담은 5개 분야 11개 공약을 제안하여 ‘인천시민 행복실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 I

### 공약요약 : 5개 분야 11개 공약

1. **경제·일자리** ① 인천공항 MRO단지 및 공항경제권 조성지원,  
② 자동차 산업 육성 ③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지원
2. **환 경** ④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⑤ 2030년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3. **보건·복지** ⑥ 인천시 제2의료원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⑦ OECD 평균이상 복지예산 확충
4. **평 화** ⑧ 인천 접경지역 평화 실현을 위한 법 제정 및 정부조직 신설  
⑨ 해안철책 및 용치 제거를 통한 평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
5. **자치분권** ⑩ 인천 고등법원 설치 ⑪ 중앙기관 인천 존치

## 1. 경제 · 일자리 분야

## 공약 ①

## 인천공항 MRO단지 및 공항경제권 조성지원

-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정비 문제로 지연·결항 사례 최근 5년간 5,141건
- 물류와 여객 등 항공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1.8.): 인천→해외 복합MRO업체 유치 등
- 인천공항 이용 항공기 안전 확보
- 인천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약 ②

## 자동차 산업 육성

-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
- 내연자동차에서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생태계의 변화 중
- 기존 자동차 연관 산업들의 미래 자동차산업으로 전환 필요
- 친환경 미래자동차(전기, 수소)로 산업 전환 정책 지원
- 부품사의 자생력 있는 육성과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공약 ③

##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지원

- 국내 유일 바이오 산학연병이 집적된 송도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
-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 환경 분야

### 공약 ④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 1991년 수도권매립지 개장 후 30년 이상 인천시민들 환경피해를 입음
-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4자 합의로 3-1공구 연장 사용 중
-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원순환정책의 원칙을 통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과 환경 정의 실현
- 인천시는 소각재를 묻는 자체 매립지 조성과 중간처리시설 현대화 및 확충 추진 중

### 공약 ⑤

#### 2030년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 기후위기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요구 높아짐
- 인천시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는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필요
-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60% 이상을 서울, 경기에서 소비, 에너지 분권을 통한 대안 모색

## 3. 보건 · 복지 분야

### 공약 ⑥

#### 인천시 제2의료원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과 위드 코로나에 따른 공공의료 중요성이 커짐
- 인천은 3백 만 시민이 거주하는 국내 3대 도시, 공항과 항만을 통해 연간 7,500만 명의 국내 및 해외 여행객이 출입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 인천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책임기관 인천의료원이 유일
- 감염병 전문병원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경북권 4곳으로 인천권역에 필요성 제기
- 인천은 300만 도시임에도 1개의 인천의료원으로 공공의료 감당, 제2의료원에 대한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
- 인천 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약 ⑦****OECD 평균(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20%) 이상 복지예산 확충**

- 송파 세 모녀, 라면 형제 사건 등은 예방적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복지예산 확충 필요 요구
- 한국의 2019년 GDP대비 사회지출(12.2%)은 OECD평균(20%) 절반 수준으로 저임금 사회복지종사자 양산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 원인

## 4. 평화 분야

**공약 ⑧****인천 접경지역 평화 실현을 위한 법 제정 및 정부조직 신설**

- 인천의 접경지역인 서해접경수역과 한강하구는 남과 북의 분쟁과 평화 요구가 공존
- 서해 접경수역은 상습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서해어민들의 생존권 위협 뿐 아니라 남북간 긴장도 조성되고 있음
-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상 민용 선박의 항행이 가능한 남과 북의 중립수역이지만 실제로 한강하구는 철저하게 통제되어 누구도 이용하지 못하는 말뿐인 중립수역임
- 경기·강원도에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듯, 서해와 한강하구도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자체 노력이 중요함
- 2020년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 된 것처럼 서해·한강 하구의 평화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 서해접경수역과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은 평화도시 인천을 넘어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됨
-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영종~옹진~강화)→장래 개성. 해주

**공약 ⑨****해안철책 및 용치 제거를 통한 평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

- 인천의 도심지역 해안선은 212km 중 67.25km가 군 해안 철책으로 막혀있음
- 국방부는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철거가 지연
- 서해5도 해안에 1970~80년대에 설치, 기능을 상실한 용치 약 6,000 ~7,000여개 방치
- 지자체의 용치 철거 요청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국방부 부정적,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고 섬의 가치가 유실됨
- 해양도시 인천으로 가치를 시민들이 느끼고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철책으로 닫힌 해안을 시민들에게 개방
- 서해5도의 평화적 이용과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방치된 용치 제거

**5. 자치분권 분야****공약 ⑩****인천 고등법원 설치**

- 고등법원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초동까지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음
- 2019년 3월 수원에 수원고등법원의 개원
-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으나 인천시민들의 사법수용과 불편해소는 태부족
- 300만 도시에 맞는 사법서비스 개선 필요

**공약 ⑪****중앙기관 인천 존치 및 유치**

-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은 국가의 공항, 항만 등 인프라로 산업기반과 연계하여 설치 운영 중
- 지역균형발전으로 인천지역은 역차별
- 균형발전의 명목하에 기계적으로 배분될 사항이 아닌 지역 특성과 자원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인천 주재 공공기관은 존치 및 유치되어야 함